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7월 7일
- 발 의 자 : 윤영애 · 김원규 · 김재우 · 김지만 · 박소영 · 박종필
이동욱 · 이성오 · 이재숙 · 이재화 · 정일균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0일

2.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 · 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4. 검토의견

□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사항을 변경한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²⁾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도시철도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의 ‘지명 업무 편람’에서 규정한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다를 사항이 아니라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항은 지난해 12월 본 조례 개정 시 도시철도역명의 제정·변경·폐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삭제하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임.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민간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변경하고,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령 제88조³⁾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음.

○ **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회의의 개최 요건, 회의에 대한 사전 통지와 예외규정, 서면 심의·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회의 사전 통지에 대한 예외규정과 서면 심의·의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안 제14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4항⁴⁾과 중복되어 삭제한 것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③ 생략**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종합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 있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변경·폐지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 후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의 대표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